



안전하고 따뜻한 설명절 보내기 대! 작! 전!





방역친화적 명절분위기 조성



설 연휴기간에도 **빈틈없는 의료대응 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상시 운영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민 예방접종 착실히 준비 → 의료진, 요양병원·요양시설 거주 노인



방역친화적 설 **명절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비대면 설명절 캠페인, 온라인 성묘서비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고도화

코로나19 **맞춤형 교통·수송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설 성수품 우선 수송 지원





국민안전 총력지원 체계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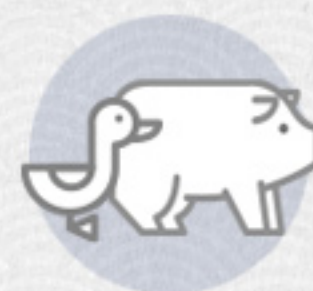


24시간 설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설 안전관리 대책' 수립,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AI 기동 점검반 지속 운영, 가금농장 방역 미흡사항 점검,
농장진입로 등 매일 소독



공공기관별 별도 안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한전 등) 에너지, (철도공사 등) 교통수송, (국립중앙의료원 등) 보건의료,
(한수원 등) 원자력

4대 핵심분야별 맞춤형 대응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교통, 화재, 산재, 전기·가스 분야 특별안전점검 및 비상대응체제 운영



서민생활 안정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명절 전 90% 지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설전 약 250만명 지급,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지원금 지급

생활밀착형 한파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쿠폰 3만원 추가지급, 국고지원 거주시설 난방기기 선별 보급, 가출청소년 방한용품 지원, 한파 쉼터 1.4만곳 운영



기부문화 분위기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설맞이 기부참여 캠페인 실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2.1일~2.15일)등)
'21년 한시적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추진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량 확대, 계란 긴급할당관세 한시 적용, 축산물 수급안정대책 수립





가계·기업 소득기반 확충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등 상향(10→20만원)
하겠습니다**

상향조정 효과가 농·어민들에게 귀착되도록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강화,
하나로마트 등의 판매수익 일부 기부 실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소액접대비 등 기준금액을 인상하겠습니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준금액(1만원 이하→3만원 이하) 상향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분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20.9~11월)을 1월중 심사 완료하여
설전 조기 지급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중소 수출업체 자금수요 고려설 명절기간 관세환급특별지원 기간(1.28~2.10) 운영





지역경제 명절온기 지켜내기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4→4.5조원), 지자체별 인센티브 추진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하겠습니다

설 전후 할인율 확대(5→10%), 구매한도 상향(월 50만원→월 100만원)



전통시장 온라인 무료배달과 할인 판매를 진행하겠습니다

'21년 설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1.25~2.14) 개최

소상공인 재도전·재취업 등을 꼼꼼히 지원하겠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원) 신속 지급, 희망리턴패키지 공고 설 전 완료





일자리 금융 패키지 지원



2월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70만명 이상을 채용하겠습니다

특히, 실직·폐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2월까지 1.3만개 이상 일자리 집중 제공

1분기 사회서비스일자리 2.8만개를 공급하겠습니다

보육 보조교사,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등 1분기 신속채용 가능분야 조기집행



92조원 규모의 명절 금융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38.4조원 규모 명절자금대출·보증, 약 54조원 규모 대출·보증 만기 연장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연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2월 4일까지만 대출 가능했으나, 코로나 상황 지속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





2021

설 명절기간 코로나19 위험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 안정 기반을 공고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